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간 자리매김 기대 입주기업 모집... 다양한 창업 지원·기업육성 프로그램 제공으로 성장 도모

전주첨단벤처단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인 전주혁신창업허브에 기존 창업동에 이어 성장동까지 갖춰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1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99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임대공간 35실과 주차장, 회의실, 교육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현재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1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식을 개최했다.

성장동에는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신성장 산업 기업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시는 AI(인공지능)와 디지털, ICT(정보통신기술), 첨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을 우대해 모집한다. 또, 전북특별자치

도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도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주혁신창업허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성장동이 본격 가동되면,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자 혁신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성장동이 마련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단순한 임대형 공간을 넘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 경제 전주의 핵심공간이자, 미래산업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전주시, 전수조사 실시...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전주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누락된 재산을 찾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총조사와 연계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2,785필지(2,639만8,000㎡) △건물 636건(78만6,000㎡) 등으로, 이 중 현재 재까지 사용허가·대부료 부과 건수는 △사용허가 576건(1억8,505만1,000원) △대부료 215건(3억709만15,000원)이다. 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등 25건에 대해서는 변상금(6,685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유재산 총조사에 앞서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 비교 및 수정 △누락재산 공유재산 대장등재 △현



장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무단사용 현황 파악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확인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재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해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변경된 공부를 반영해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조사 결과 무단점유·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적법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원 발굴을 통한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천일제지 건축법·건축물 관리법 위반 의혹 조사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건축 허가 취소 요구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여러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점에서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 불허가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일제지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허처분의 사유가 제한적이고, 대기배출시설허가과 건축허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시는 전력을 다해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대비해 불허처분이 행정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를 시민들이 천일제지 공장 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천일제지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팔복동4가 185-5번지에서 185-

5와 185-15번지지의 대지 분할 승인과 SRF 소각 사용시설 건축허가 △해체 신고 및 완료 신고 없는 건축물 철거 등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먼저, 천일제지는 2014년 이후 팔복동 4가 185-5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4개 동을 불법 증축해서 사용해 왔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대략 690㎡ 규모의 건축물 2개 동,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대략 400㎡ 규모의 건축물 1개 동,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대략 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천일제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9월 1일 토지 분할을 승인받았다. 불법건축물 2개 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주시의 토지 분할 승인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다. 지난 2월 17일 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에서는 앞선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설사 천일제지 내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 동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주



천일제지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 위반 항공사진

장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지난 2월 23일 185-5번지와 215-33가설 건축물 신고 또한 기존 불법 시설을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불법 건축 양성화 기준에 맞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끝으로 천일제지 내 고형연료 소각 사용시설 부지 내 가설 건축물 (일부는 신고 완료, 일부는 불법)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팔복동 4가 185-15번지는 물론 천일제지 내 사업장 건축물 관련 해체 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 제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은 불법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전주시가 진정한 조사가 우선이다"고 역설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건축 허가를 무효화할 정도의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SRF 소각 사용시설 반대 주민들이 '천일제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행정심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체계적 지하수 관리·빗물 이용 활성화 집중

전주시가 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와 빗물 이용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용삼)는 최근 친환경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와 빗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28개 보조관측망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지하수 관리 시설과 함께 연동돼 작동하는 운영시스템(SW) 상태 등

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지하수 관측망의 중요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329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고장 유무와 여과장치·유량계 파손 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의 작동·유지 상황을 철저히 점검기로 했다.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생산된 담수는 조경과 텃밭, 청소, 분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수 효과 및 물 자원 공급을 증대시켜 바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안성시의회, 교류 활성화·지역 발전 협력 약속

전주시의회와 경기 안성시의회가 15일 상호 교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시의회를 찾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방문단 일행은 한옥마을과 전주 문화재단을 찾아 지역 특성을 갖춘 관광 정책을 체험하고, 안성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살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안성시



의회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기
에 시민 한 분 한 분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뛰는 경제
가슴 벅찬 도전

김제시